

주요국 관세 인상의 글로벌 교역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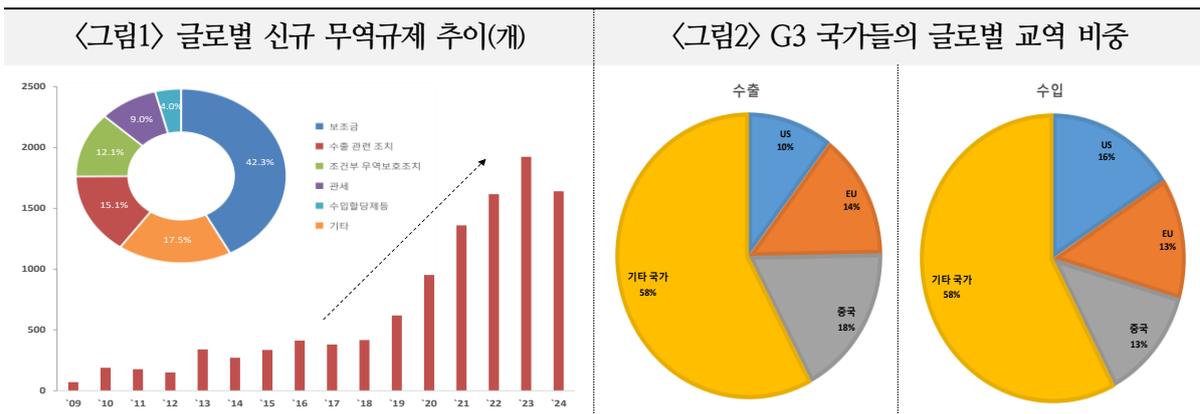
박진혁 | 부전문위원(3705-6149)

김위대 | 경제리스크분석부장(3705-6240)

- [이슈] 세계 무역흐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국들의 관세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교역 영향에 대한 점검 필요
 - 금년 들어 주요국들(美 5.14일, EU 6.12일, 캐나다 8.26일)은 전기차(EV) 등에 대한 對중국 수입관세율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였으며, 중국도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려가 점점
 - 무역장벽을 높이는 이번 조치는 G3 국가들의 무역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교역의 주요 변수로 부각
- [글로벌 교역 영향] 주요국 관세 인상 이후 무역 재배치 가속화(Tariff-Driven Reallocation) (우회 수출 포함)에도 불구하고 경제 파급효과 등 감안 시 글로벌 교역이 악화될 소지
 - (관세 주도 재배치 가속화) 미국과 EU의 관세 조치는 주요국간 교역을 제3국으로 이전시키는 무역 재배치를 촉진시키면서 글로벌 교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
 - '17~'19년 사례 추정치(GS)에서는 관세 주도 재배치의 약 1/3이 중국의 우회수출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 증가
 - (GDP와 교역 동력 약화) 관세 인상은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소비,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교역 위축요인으로 작용
 - GDP 감소 효과는 수입과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무역활동을 제약할 가능성
- [전망] 주요국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영향은 현재 수준에서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주요국간 무역 갈등 심화 가능성이 커 교역 영향이 점차 확대될 소지 상당
 - 특히, 트럼프의 관세 인상안(對중국 60% 고율관세 및 10% 보편적 기본관세) 적용 시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약 20%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의 보복조치, 무역정책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교역 하방위험 확대 우려 증가
- [평가 및 시사점] G3간의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
 - 중동사태와 라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G3 간의 관세 인상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

□ [이슈] 세계 무역흐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국들의 관세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교역 영향에 대한 점검 필요

- 팬데믹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무역장벽이 크게 높아졌으며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증가하는 모습
 - 보조금, 반덤핑, 세이프가드 등 각국의 정책 대응이 '20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두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<그림> 무역정책 불확실성지수도 마중 무역분쟁 이후 최고수준으로 상승 <그림>
- 금년 들어 주요국들(美 5.14일, EU 6.12일, 캐나다 8.26일)은 전기차(EV) 등에 대한 對중국 수입관세율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였으며, 중국도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려가 점점
 - 주요국들은 중국의 보조금 정책 등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산 전기차 관세 등을 인상<참고1>
 - 중국은 맞불관세(미국 및 EU산 자동차) 검토, 반덤핑 조사(EU산 돼지고기, 캐나다산 유채씨) 착수, WTO 제소(EU의 전기차 관세부과에 대한 부당성 제기) 등 다각도로 대응
- 무역장벽을 높이는 이번 조치는 G3 국가들의 무역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교역의 주요 변수로 부각. 특히 교역 분절화 추세, 지정학적 갈등 구도 등과 맞물려 주요국들간의 무역 갈등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경계
 - 미국, EU, 중국은 세계 3대 수출국인 동시에 수입국으로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%를 상회<그림2>
 - 러우 전쟁 이후 진영간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서방국가들의 脫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, 과거 무역분쟁으로 이어진 '18~'19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 부각



자료: GTA

주: 비율은 '24.7월 기준

자료: Bloomberg, WTO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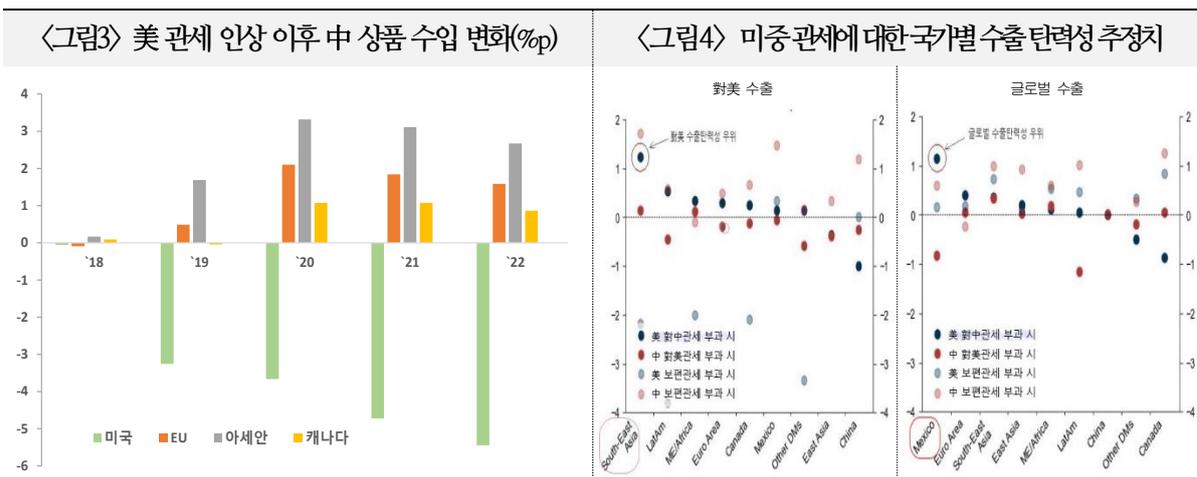
[참고1] 최근 주요국 對中 관세 인상안

	주요내용	시행	비고
미국	전기차(25→100%), 철강·알루미늄(7.5→25%) 등	순연	USTR 결정 시점 약 2주후 발효
EU	전기차(10→최대 46%)	'24.7월~	10월 관세율 등 최종 확정
캐나다	전기차(6→100%), 철강·알루미늄(6→25%)	'24.10월~	-

자료: 각종 외신 등

□ [글로벌 교역 영향] 주요국 관세 인상 이후 무역 재배치 가속화(Tariff-Driven Reallocation)
(우회 수출 포함)에도 불구하고 경제 파급효과 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약화될 소지

- (관세 주도 재배치 가속화) 미국과 EU의 관세 조치는 주요국간 교역을 제3국으로 이전시키는 무역 재배치를 촉진시키면서 글로벌 교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
 - 미중 무역분쟁 당시 對중국 수입품 가격 상승, 중국의 가격 경쟁력 하락 등으로 미국의 대중 수입은 감소했으나 여타 국가들과의 교역은 점차 증가
 - '18년 이후 미국의 對중국 수입 감소세와는 대조적으로, 중국과의 지속된 긴장관계속에서도 EU, 캐나다 등 서방국의 中 상품 수입은 증가<그림3>
 - '17~'19년 미국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수입국을 전환한 상품규모는 약 950억 달러이며, 이 중 관세요인이 거의 절반(410억달러)을 차지(GS)
 - 특히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 시 생산의 대체가능성과 공급탄력성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동남아, 멕시코 등이 이번 관세 인상에 따른 수혜국이 될 가능성(GS)<그림4>
 - 미중 무역분쟁 이후 주요국들의 ‘차이나 플러스 원’ 전략과 함께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부분품 수출도 확대. 또한, 무역 재배치 과정에서 이들 국가를 통한 중국의 완제품 우회수출 사례도 크게 증가(4P, 상단 참조)
 - * 서방국들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위험 등을 분산하기 위해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도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전략
 - 무역 재배치로 반사이익을 얻은 일부 국가의 경우 생산시설 확충, 새로운 무역협정 추진 등을 통해 미국, EU 외 수출도 증가할 소지



자료: Fed 주: 수치는 '17년 대비 중국 대상 제품의 수입 점유율 변화

자료: Goldman Sachs 주: '18~'19년 당시 관세 및 무역흐름 변화 기반 추정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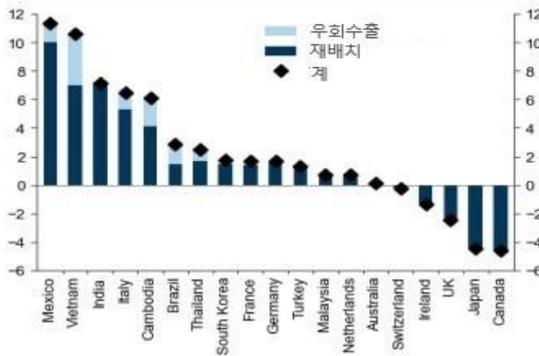
[참고2] 우회수출 증가

▶ '17~19년 사례 추정치(GS)에서는 관세 주도 재배치의 약 1/3이 중국의 우회수출*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<그림5>

* 무역재배치는 선진국의 수입선 탈 중국화를 의미하는데, 중국은 수출실적 보호를 위해 거점국가를 활용한 우회수출로 대처. 이에 따라 재배치 물량 중 일부에는 우회수출이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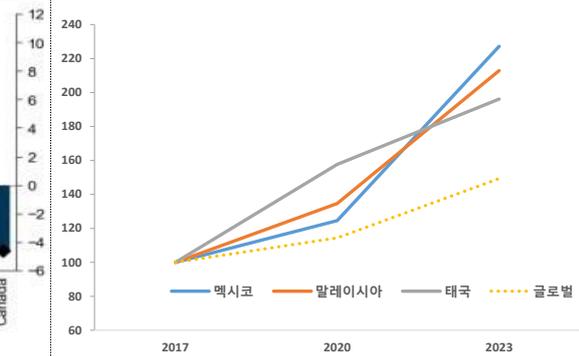
- 무역분쟁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의 멕시코(127%↑), 말레이시아(113%↑) 수출 등이 가파른 증가세 시현
- 주요국 관세리스크 확대에 따라 ‘중국→거점국가→미국(EU)’ 등으로의 수출 경로 전환이 보다 탄력을 받아 거점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<그림6>
- 다만 미국의 ‘멕시코 경우 중국산 철강’에 대한 25% 관세 부과(7.10일처럼 제3국 경우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확대될 경우 관세 회피를 위해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상존
- 최근에는 고비용과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아프리카 등을 거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관측

<그림5> 美對中 관세 부과에 따른 對美 수출 증가규모(10억 달러)



자료: Goldman Sachs

<그림6> 주요 전략수출국에 대한 中 수출규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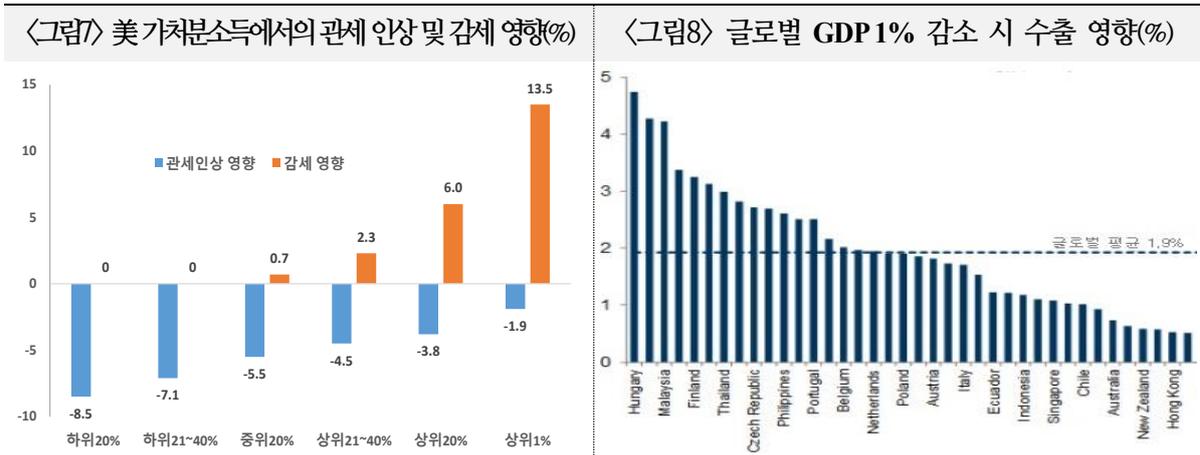


자료: FT

주: 2017년=100

- (GDP와 교역 동력 약화) 관세 인상은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소비,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교역 위축요인으로 작용
 - 미국, EU에서의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가치분소득 감소와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여타국들의 수입 가격 및 물가 상승압력 등은 글로벌 수요 감소요인
 - 관세수입 증가가 소득세 인하로 이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주로 귀속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데 그칠 소지(GS)<그림7>
 - 이번 조치로 추후 교역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국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상존
 - 美 관세 인상에 따라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캐나다(대미 수출이 GDP의 약 20%)와 멕시코(약 25%) 등에서의 투자가 보다 위축될 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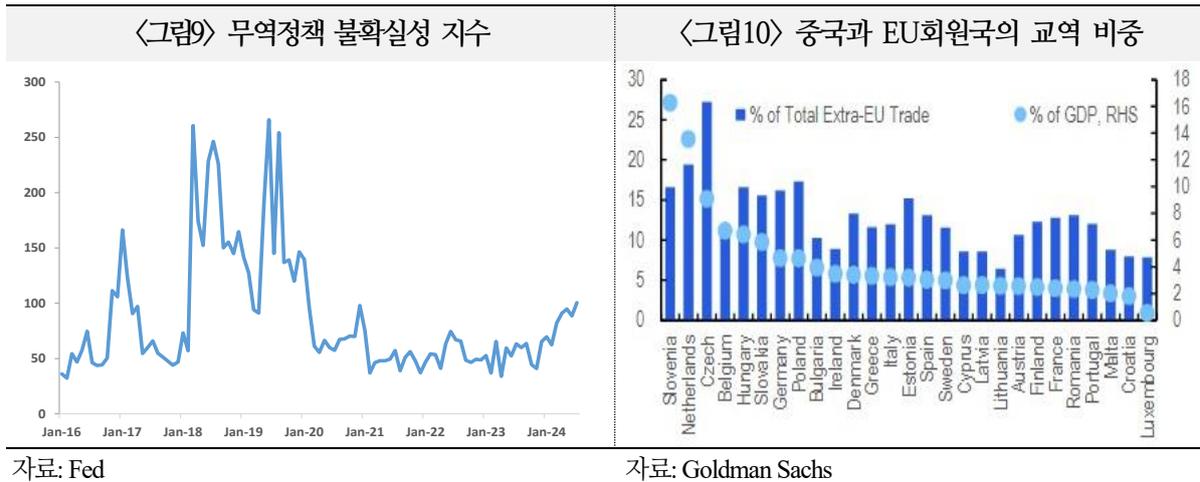
- 특히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'18~'19년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美 GDP는 0.3%p, 유로존은 0.9%p 감소 가능성(GS)
- GDP 감소 효과는 수입과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무역활동을 제약할 가능성
- 글로벌 GDP가 1% 감소할 경우 글로벌 수출은 평균 2%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수요측면 하방압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폭이 보다 확대(GS)<그림8>



자료: PIIE 주: 50% 관세 수입규모=감세규모 가정, 자료: Goldman Sachs
 각 수치는 세후 소득 증감을

□ [전망] 주요국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영향은 현재 수준에서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주요국간 무역 갈등 심화 가능성이 커 교역 영향이 점차 확대될 소지 상당

- 특히, 트럼프의 관세 인상안(對중국 60% 고율관세 및 10% 보편적 기본관세) 적용 시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약 20%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의 보복조치, 무역정책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인한 교역 하방위험 확대 우려 증가
 - 다만 현실적으로 10%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 경우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맞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 對중국 고율관세는 무역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인상안을 전면적으로 또는 적시에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존재(Capital Economics 외)
 - 유효관세율 1%p 상승 시 세금 인하 수준과 상대국들의 보복조치 여부에 따라 美 GDP가 0.05%~0.15% 감소할 소지(GS)
- 한편 EU와 중국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한 채 잠정관세가 확정될 경우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 등과 같은 강경 스탠스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움
 - 중국은 자동차, 유제품, 와인 등에 대한 보복관세와 희토류, 리튬 수출 제한조치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으며, 미-중 무역(23년 기준 5,730억 달러)을 상회하는 EU-중국 간 무역규모(7,980억 달러) 등을 감안할 때 무역마찰 시 파급력은 상당할 소지



□ [평가 및 시사점] G3간의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

- 중동사태와 러·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이 크게 약화한 상황에서 G3 간의 관세 인상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
 - 그간의 무역 자유화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지를 교역에 참여시키게 하여 공급 측면을 유연하게 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무역 재분배 심화 시 비효율적인 생산지와 교역을 하게 되는 손실 발생(Trade Diversion Effect)
 - 더구나 재분배 초기에는 대체 생산지를 찾고 생산시설과 통관 작업의 유연화 등을 구축하는 데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
- 또한 저비용 생산지를 교체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수입물가 상승효과는 과거와 같은 저인플레이 유도 능력을 제약할 가능성 증가
 - 무역부문의 세계화가 수십년 동안 안정적인 저인플레이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지만 보호주의로의 회귀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저해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49 혹은 jhpark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